



주간통일정세 2012-44(2012.10.22~10.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4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내각회의 열어 경제건설 집중 논의(10/22, 인민일보)**
 - 북한이 최근 내각 회의를 열어 4분기 경제건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함.
 -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각 회의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3분기 경제를 결산하고 4분기 경제건설 목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4분기가 올해 경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계속해서 전력과 석탄 생산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 불발탄 처리중 사망 인민보안원에 '영웅'칭호(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한국전쟁 때 미군이 투하했던 폭탄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로 사망한 인민보안국 보안원 두 명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강원도 인민보안국 소속 김금수, 한병남이 지난 20일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떨어뜨린 시한폭탄을 처리하던 중 뜻밖에 폭탄이 터지는 순간 동지들을 구원하고 시신도 못 남긴 채 장렬하게 희생됐다"며 "이들에 대한 공화국영웅 칭호 수여식이 27일 원산에서 열렸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北, 최영림(총리)·전승훈(부총리, 보고) 등 참가下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10.22, 중통)
 - 회의에서는 3·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총화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총돌격전을 벌려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데 대한 문제 토의
 - 올해의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결정적 시기인 4·4분기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지적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내각결정 심의채택
- 김일성 父子 형상 모자이크 영상작품(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리) 준공식, 10.23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진행(10.23, 중방·평방)
 - 문경덕(평양시당책, 준공사)·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
- 최영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생산실태 현지 요해(10.25, 중통 · 중방)
 - 이에 앞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시공일정에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음.
- 제23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10.25 최태복(黨 비서) · 김용진(내각 부총리) · 김승두(교육총 위원장) ·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참가下 진행(10.25, 중통 · 중방)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52.10.28) 60돌 기념보고회, 10.28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및 '김일성훈장 · 김정일훈장 ·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10.28, 중방 · 중통)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오극렬, 려춘석(김일성군사종합 대학 총장, 기념보고) 등 참석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연회, 10.28 김정각,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오극렬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8, 중통 · 중방)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계기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연구원→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명명(黨 군사총 명령) 모임, 10.28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현철해 등 참가下 진행(10.29, 중통 · 중방)

나. 사회 · 문화

- 올 1~9월 北주민 취업 방중 6만 명...전년비 11%↑ (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6만1천100명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함.



-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 목적으로 방중한 인원(5만5천명)보다 11% 증가한 것이며, 올해 들어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가 그만큼 증가한 셈이라고 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은 22일 발표한 '2012년 1~9월 외국인 입국 현황'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13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명)에 비해 20.9% 증가했다고 밝힘.
- **北 금수산태양궁전 앞 대규모 공원 조성(10/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 이 방송은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넓은 광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모두 뒤엎어 공원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인 '지오아이'가 제공한 위성사진에서도 평양 중심의 대규모 공사 현장이 확인된다고 밝힘.
 - 미국의 위성사진 전문가인 커티스 델빈 씨는 RFA에 "금수산태양궁전 앞 콘크리트 광장의 60%(5만7천㎡)가 대형공원으로 바뀌고 있고 궁전 주변에 공사 잔해물이 있는 것을 볼 때 내부에서도 중요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北노동신문 "자연재해로 올해 농업에 적잖은 지장"(10/24, 노동신문)**
 - 북한은 올해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업생산에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봤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한해 농사의 결실과 과학기술적 총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우리나라 농촌들에서는 흑심한 가뭄(가뭄)과 큰물(홍수), 태풍 피해로 농업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고 전함.
 - 또한, 신문은 "기상조건과 종자, 지력, 기계수단, 영농물자 보장 등에 대한 정확한 타산(계산)과 노력조직, 회계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농업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농업부문 일꾼과 기술자들이 내년도 농사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고려항공, 인터넷 예약서비스 개시(10/24, 연합뉴스)**
 -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과 발권 업무를 하는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고려항공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지난 8월7일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으며 "고려항공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한 비행기 좌석 예약과 전자비행기표(전자티켓) 발급봉사를 제공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모교' 김일성군사종합대에 김정일훈장(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을 통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김



정일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이 통신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창립 60돌을 맞으며 김정일훈장이 수여됐다"며 "대학은 대학 안에 김정은 동지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렸으며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여 주체전법으로 현대전을 능숙히 조직지휘할 수 있는 군사지휘관들을 키워냈다"고 소개함.

● **北 22호 정치범수용소 폐쇄 안돼(10/24, 연합뉴스)**

- 북한 북부지역의 대표적 정치범 수용소인 '22호 관리소'가 지난 6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수십장을 제시하며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HRNK는 지난 11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2010년 11월 및 2011년 5월의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2호 관리소가 올해 폐쇄되거나 해체됐다는 보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함.

● **평양시 인기 1위 호텔은 고려호텔(10/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을 찾았던 여행객들이 평양시내 최고의 호텔로 고려호텔을 꼽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문 여행정보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이 웹사이트가 북한에 살았거나 북한을 여행해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 외국인 등으로부터 평양시 호텔에 대한 이용소감 등을 조사한 결과 고려호텔이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았다고 전함.
- 이어 양각도호텔, 보통강호텔, 해방산호텔, 양강호텔, 평양호텔, 서산호텔이 순서대로 2~7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유스호텔(Youth Hotel)이었음.

● **北 새 태블릿PC, 中 제품과 '판박이'(10/26, 엔케이뉴스)**

- 26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엔케이뉴스'(www.nknews.org)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TV는 최근 방송에서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새 태블릿 PC를 공개함.
- 중앙TV는 이 제품에 대해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다"며 "국가의 과학기술 보급, 문화·교육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함.
- 또 북한당국이 최근 11년제 학제를 12년제로 바꾸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학생들이 '조선글사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키보드나 전자펜으로 글을 입력할 수 있고 독특한 모양과 다양한 색의 폰트로 풍부한 감수성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駐북한 중국대사, 함경남도 공업시설 시찰(10/25, 연합뉴스)**
 - 북한과 베트남이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기로 하는 등 농업부문 협력을 확대한다고 베트남통신(VNA)이 25일 보도함.
 - 이 통신은 리명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대표단이 전날 하노이에서 하 티 키에트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서기와 만나 환담했다고 전함.
 - 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이 공산당 주도로 이뤄진 개혁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힘.

- **北 외무성 "美 대북정책 대표 망발" 비난(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5일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동북아순방 기간 발언에 대해 "우리를 걸고 드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며칠전 글린 데이비스가 우리 주변(동북아)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이 '9·19공동성명을 파기하면 큰 잘못이며 자기의 의무이행에 나서야 한다'느니 따위의 분수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미국이 9·19성명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우리보고만 이행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함.
 -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노골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은 우리가 핵 억제력을 더욱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데로 떠밀었다"고 주장함.
 - 또한, 그는 "사실상 도발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유치한 반공화국 뼈살살포놀음에 매달리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일삼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서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함.

- **北 유엔대표 "실용위성 계속 발사할 것"(10/25, 조선중앙방송)**
 -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우주개발을 위한 자주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실용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19일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제3위원회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안건 토의 연설에서 "우리의 우주개발 노력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행사인 동시에 우주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르는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같이 밝힘.
 - 북한 대표는 "일부 나라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 위성도 쏘아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



용하는 데서 모든 나라에 평등하고 차별 없는 주권을 보장하며 선진과 학기술의 보급 및 호상협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우주군사회와 함께 우주기술협조의 정치화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덧붙임.

● **北, 올 상반기 스위스 총기류 17만弗 어치 수입(10/26,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상반기 스위스로부터 17만 달러어치가 넘는 총기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코트라가 스위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 스위스에서 권총, 소총 등 총기류 17만4천 달러 어치를 수입했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기용 산탄총과 소총 등 폭약점화장치가 4만4천 달러어치로 가장 많고 공기총, 가스총 등이 3만4천 달러, 리볼버 및 피스톨식 권총이 2만1천 달러어치를 기록했으며, 격발장치, 피스톤 등 총기 부품은 7만5천 달러어치로 파악됐다고 밝힘.

● **北 평안북도-中 랴오닝성 교류 활발(10/26, 요녕일보(遼寧日報))**

- 북한과 중국 접경인 평안북도와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여 주목된다고 요녕일보(遼寧日報)가 26일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최종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친선대표단은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을 방문해 천정가오(陳政高) 성장을 접견했음.
- 천 성장은 이 자리에서 "랴오닝성은 역대로 평안북도와와의 친선·합작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압록강대교(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관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이번 최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촉진해 더 빠르고 좋은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으며,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랴오닝성과 평안북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황금평·위화도 개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중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함.

● **北-中, 나선특구 관리위 청사 착공(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나선 특구의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착공식에는 북측에서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중국 측에서 장안순(張安順) 지린성 연변주당 서기, 전보진 청진주재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함.
- 착공식에서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나선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진위근 중국 지린성 부성장은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 것은 중조 나선경제무역지대 협조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힘.

● **北, 일본 언론에 나선특구 공개(10/27, 연합뉴스)**

-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본 언론에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나선경제특구를 공개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사들은 25일 나선특구의 나진항과 수산물 가공업체, 5성급 호텔 등을 방문했으며 나선시 인민위원회 관계자는 나선시와 중국 국경지역을 잇는 도로가 완성됐고 항만설비 등 기반시설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개발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함.

● **中, 北 나선특구에 전력 공급 가시화(10/27, 중국광파망(廣播網))**

- 중국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은 나선특구 송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보고서가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기초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보도함.
- 이 사업은 북·중 접경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에서 나선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를 설치하고 나선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공기업인 SGCC는 베이징경제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나선특구 송전사업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보완·개선작업을 거쳐 사업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 **기타 (대외 일반)**

- 우리 정부의 '미사일정책 선언(10.7)' 관련 '공화국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지배주의적 야망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억제력 백방으로 강화' 위협(10.23, 중통·노동신문·평방·침략자들은 미사일 세례를 피할 수 없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자위대 헬기 독도상공 불법침입(9월) 및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움직임 관련 '日 반동들이 독도강탈채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군사적 방법으로 강탈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침략행위, 날강도행위'라고 비난(10.23, 중통/위협천만한 독도침략기도)
- 北 외무성 대변인, 10.25 중통 문답을 통해 美 국무부 對北정책 특별대표(글린 데이비스)의 對北촉구(北 위협적 행동 중단 등) 관련 "미국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우리(北)보고만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10.25, 중통·중방)
 - 미국의 협상자가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과 경위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대북정책 대표 "北, 위협 그만두라"(10/22, 연합뉴스)

-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빠라) 살포를 구실로 임진각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당국자가 북한에 위협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앞으로라도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그만두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그는 "한국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향하는 전단 풍선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민간 지역을 포탄으로 겨누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했다"며 이같이 말함.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풍선에 폭탄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절제와 지혜로 이 문제에 대처해달라고 주문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어 지난달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회(NEACD)에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해 비공식 북미 접촉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이 고립을 선택할 것인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 이행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그는 이어 '평양의 새 정부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북한이 국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아울러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번 동북아 순방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서 벗어나는 나쁜 징후 속에서도 한·미·일 사이의 강한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0일 베이징 도착에 앞서 17일 일본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벌인데 이어 18~20일 서울에 들러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천식 통일부 차관 등과 만나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함.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방중 기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비롯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일 6자 수석대표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짐.

나. 미·북 관계

● 北 외무성 "美 대북정책 대표 망발" 비난(10/25,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25일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 동북이순방 기간 발언에 대해 "우리를 걸고 드는 망발"이라고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며칠 전 글린 데이비스가 우리 주변(동북아)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이 9·19공동성명을 파기하면 큰 잘못이며 자기의 의무이행에 나서야 한다느니 따위의 분수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미국이 9·19성명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우리보고만 이행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함.
 -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노골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은 우리가 핵 억제력을 더욱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데로 떠밀었다"고 주장함. 그는 "사실상 도발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유치한 반공화국 뼈라살포놀음에 매달리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일삼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 통일대전으로" 맞서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22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베이징 웨스턴호텔에서 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새 정부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북한이 국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함.
- 데이비스 "美차기정부 대북정책 변화 없을 것"(10/27,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스 대표는 지난 24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갈래 접근법을 취해왔으며 이같이 말함. 데이비스 대표는 또 최근 아시아 순방 기간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강화해줄 것을 중국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힘.
 -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 같지만 북한은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북한의 최근 변화를 실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폐쇄한 상황에 계속 머무느냐 아니면 비핵화 등 국제의무를 이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한반도를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다"며 북한이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미국은 매우 신속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다. 중·북 관계

- 올 1~9월 北주민 취업 방중 6만 명...전년비 11%↑ (10/23, 연합뉴스)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



민은 6만1천100명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전함.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 목적으로 방중한 인원(5만5천명)보다 11%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가 그만큼 증가한 셈임. 중국 국가여유국은 22일 발표한 '2012년 1~9월 외국인 입국 현황'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13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명)에 비해 20.9% 증가함.

- 방문 목적별로는 취업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회의나 사업 목적 방문자는 3만8천400명(28.9%), 관광·레저 목적이 3천400명(2.6%), 친지 방문이 100명 등 순이었음. 연령대별로는 45~64세가 6만8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5~44세가 5만6천3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음. 성별로는 남자가 10만5천900명, 여자가 2만7천100명으로 나타남. 중국 방문을 위해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5만2천100명)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3만4천700명), 항공편(2만9천100명), 기차(1만2천900명) 순이었음.

라. 일·북 관계

● 유족들이 평양 도착 일본인 유골 문제(10/23, 산케이신문)

- 종전 전후에 현재의 북한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족들 9명이 23일 오후, 성묘 때문에, 북경을 경유하여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함.
- 부친이 북한 동부의 원산에 매장되었다고 하는 나고야시 니시구의 사와다 토루자씨(76)는 도착 직후에 공항에서 "곧 있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쁘다. 아버지, 마중 나오셨냐고 말하고 싶다."라고 눈물지으면서 말함. 일행은 일본인 매장지로 여겨지는 원산 등지를 방문하여 장소에 지참한 꽃을 바치는 등 30일에 귀국할 예정임.

● 日 민주당 의원 방북..외무상 "유감"(10/25, 연합뉴스)

- 일본의 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에 보고 없이 북한을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음. 25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민주당의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에 남았다가 숨진 일본인 유족과 함께 지난 23일 매장지 시찰 등을 위해 북한에 입국함.
- 이와 관련,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리타 의원이 정부·여당과 상의 없이 북한에 입국했"면서 "여당 의원의 방북은 유감이다"고 불쾌감을 표시함. 교도통신은 향후 여당과 야당이 모두 아리타 의원의 북한 방문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경제 제재로 국가 공무원의 북한 방문을 중단했으며, 국민에게도 방문 자숙을 요청하고 있음.

● "일본인 납북자 41명 평양에 감금"(10/28, 연합뉴스)

- 일본 산케이신문은 28일 북한을 탈출한 전 노동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평양에 일본인 납북자 41명이 감금돼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작년 11월 북한을 탈출한 전 조선노동당 간부(남성)가 27일 도쿄에서 열린 북한 문제 관련 학회에 참석해 "남성 25명, 여성 16명의 일본인 납북자가 현재도 평양에 있는 격리시설인 초대소에 감금돼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함. 하지만, 이 탈북 노동당 전 간부는 일본인 납북자 41명의 감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 신문에 의하면 탈북 노동당 전 간부는 메이지대(明治大)에서 열린 '아시아 인도·인권학회보고회'에 북한 증언자로 참석함. 그는 "직접 일본인 납치 피해자 관리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2002년 10월 5명의 일본인 납북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41명의 일본인 납북자가 초대소에 감금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함. 그는 일본인 납북자 41명의 존재에 대해 "최근 5년 이내에 여러 차례 들었다"고 밝힘.
- 이들 납북자는 모두 노동당의 공작기관인 작전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공작원이나 다른 납북자가 생활한 평양 용성지구의 초대소에 남녀가 별도로 수용된 것으로 알려짐. 탈북 노동당 전 간부는 그러나 "일본인 납북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이름도 모른다."고 말함. 그는 "일본인은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어 (납치를 통해) 대남 공작에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들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일본에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 노동당 전 간부가 증언한 일본인 납북자 41명은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17명보다 훨씬 많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17명의 납북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2002년 양국 정상 합의에 따라 일본에 귀국함.

마. 러·북 관계

● 中 훈춘, 울 들어 북·러 출입 인원 급증(10/22, 연합뉴스)

-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을 통해 북·중, 중·러를 왕래한 인원이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22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올해 1~9월 훈춘에 있는 각 통상구의 출입인원과 차량은 50만 명, 8만6천대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6%, 20%씩 증가함. 특히 이 기간 북한 나선특구, 나진항으로 향하는 취안허(圈河)통상구의 출입인원은 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가 늘었음.
- 신문은 훈춘에 국가급 경제특구인 '훈춘국제합작시범구'가 지정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출입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함. 북한 나진항을 확보해 동해 뱃길이 열린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나선을 연결고리로 삼아 국제적인 물류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임.
- 지난 6월에는 훈춘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거쳐 한국 동해항, 일



본 사카이미나토항을 잇는 4개국 육·해 복합운송항로를 개설하기도 함.

바. 기 타

● "한·미 새 대통령, 탈북자 돕도록 중국 압박해야"(10/23, 연합뉴스)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부편집장을 지낸 멜라니 커크패트릭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23일 "곧 선출될 한국과 미국의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문제 전문가인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북한으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North Korea):아시아의 지하철도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The Untold Story of Asia's Underground Railroad)' 출간을 기념해 WSJ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힘.
- 75명의 탈북자를 비롯한 200여명을 인터뷰해 쓴 이 책에서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인들의 탈북을 돕기 위한 비밀조직인 '아시아의 지하철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개함. 이 비밀조직의 이름은 1850년대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조직 '지하철도(Underground Railroad)'의 이름을 딴 것임.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중국으로 건너오는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학대는 비도덕적 일뿐 아니라 국제조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함. 그는 또 "한국의 통일이 중국에 위협이 아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중국은 국경에 미군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김씨 독재정권이 사라진다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함.
-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엔 주민 2천400만명이 아직도 노예상태로 갇혀 있고 이중 2만4천명만이 탈북해 한국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의 탈출을 돕기 위한 노력이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미국 노예들을 구출하던 '지하철도' 역시 수십년 간 운영됐지만 고작 10만명의 노예를 탈출시켰다"면서 "하지만 이런 노력이 결국 모든 노예 해방에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함.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아시아의 지하철도'가 탈북자 구출의 어려움, 자금부족 등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끝내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기도 함.
- 탈출에 성공한 북한인들이 북한의 끔찍한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반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임. 그는 "중국 밀수꾼들이 북한에 들어가 외부 소식을 전하고 북한인들이 중국,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불법 휴대전화, 라디오 등도 전달한다."고 소개함.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인들을 김씨 일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로봇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탈북자들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지난 60여 년간의 압제가 자유와 더 나은 삶에 대한 북한인들의 열망을 누그러뜨리지 못했



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도 있다"고 강조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합참의장, 2015년 전작권 전환 재확인(10/24, 연합뉴스)

-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텀프시 미 합참의장은 23일(현지시간)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2015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전작권 전동제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양국 합의사항을 재확인함.
- 양국 합참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MCM이 끝난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구사령부 검증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전략동맹 2015'에 명시된 검증 지침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함.
- 양국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북한 침략 및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동맹 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함. 양국은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전략적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MCM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합의함.
- 합참 관계자는 "정례 MCM은 매년 10월 한 차례 개최됐으나 앞으로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개최, 더 자주 한미 간 군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MCM은 내년 4월경에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관련, "양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추진 진도는 61%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전함.

● 軍 "미사일 조기경보 美와 공유..MD편입 아니다"(10/26, 연합뉴스)

- 국방부는 26일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논란을 거듭 강하게 부인함.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구상하는 MD 체계는 다층방어체계로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힘. 미국은 '상승-중간-종말단계'의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5천km 정도의 탐지 범위를 갖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식별해 종말단계 하층(40km 이하)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하기 위한 500~1천km 정도의 탐지범위를 갖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임. 이 당국자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A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의 다층방어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함. 그는 "오히려 KAMD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기경보체계와 지휘통제체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말함.

- 그는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탐지 관련 일부 정보공유와 관련, "조기경보체계와 지휘통제체계는 한미 연합 방위차원에서 미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를 MD 참여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반박함. 이와 관련, 그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우리 이지스함이 (발사 사실을 레이더로) 잡아서 미국과 일본에게 (궤적 정보를) 줬는데 MD 참여라는 오해를 살까 봐 정보를 안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함. 군 당국은 미국의 MD 참여 기준으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X-밴드 레이더 설치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을 꼽았음.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런 일을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리 정부가 MD 참여를 부인하면서 비밀리에 MD 체계 편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함.

나. 한·중 관계

● 中, 李대통령 연평도 방문에 부정적 반응(10/22,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2일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물론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함.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빠라) 살포로 남북한 당국 간에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함. 그는 "중국은 남북한이 협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홍 대변인은 이를 전인 20일에도 대북 전단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 충돌을 부를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음. 환구시보(環球時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매체들도 한국 내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중국이 근래 외교채널로 남북한 당국에 전단 살포 사건으로 조성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각측에 불리하다며 냉정과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다. 한·일 관계

● 日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못하겠다" 항소(10/2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하기로 함.
- 아사히신문은 24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상당수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지난 11일 판결과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되, 영향이 작다고 판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



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함.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 판결 후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함.

- 하지만 이는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2010년 5월의 외무성 훈령에 배치된다. 도쿄지방법원이 상당수 공개를 명령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1951~1965년 사이 작성된 문서임. 도쿄지방법원은 판결에서 30년 이상 된 문서의 비공개와 관련,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중 268건에 달함.

● "日, 독도 단독 제소 연기하기로"(10/26, 연합뉴스)

-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11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일본 정부가 애초 10월에 제소할 방침이었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궤도를 수정했다고 전함. 외무성 간부는 "단독 제소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노리겠다."고 언급, ICJ 제소를 외교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함.
- 일본이 단독 제소 시점을 미루기로 한 것은 중국과의 대립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단독 제소로 한국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임. 일본 정부 내에는 단독 제소를 미룬 뒤 11월 5, 6일 이틀간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나 11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통신은 또 "제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예상 이상으로 시간이 걸려 작업이 지연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전함.
- 한편 일본이 애초 10월을 제소 시점으로 검토한 것은 한국 대선이 임박했을 때 제소를 했다가 후보들의 대일 비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앞서 기라 슈지(吉良州司)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ICJ 제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함.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외무



성 내에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단독제소를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함.

● **美 위안부 기림비에 '말뚝테러'..美당국도 경악(10/27,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시의 위안부 기림비에 일본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말뚝테러'가 발생해 한인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비슷한 시간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건물의 현판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가 써진 스티커가 발견됨. 미국 당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함.
- 기림비 건립을 주도했던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옛 한인유권자센터)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20분께(현지시각) 팰팍 공립 도서관 앞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 바로 옆에 1m 길이의 흰색 말뚝이 박힌 것이 발견됨. 목격자 윤금중씨(68. 월남전참전동지회 회원)는 "화분을 교체하려고 기림비에 왔다가 말뚝을 발견했다"며 "범인이 급하게 떠난 탓인지 제대로 박히지 않고 기림비에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였다"고 말함. 말뚝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일본 글씨로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기림비 위에는 같은 문구가 담긴 팻말이 놓여 있었음. 방식이나 말뚝의 내용을 볼 때 지난 6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윤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말뚝과 팻말을 수거해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함.
- 시민참여센터는 제임스 로튼도 팰팍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기림비는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조성한 공유 재산으로 이런 테러가 발생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범인을 색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또 "팰팍시는 기림비를 훼손하려는 일본 측의 지속적인 시도에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테러를 감행한 것은 팰팍 시민은 물론 전체 미국 시민들을 향한 야만적 테러"라고 규탄함. 로튼도 시장은 "이 사건을 보고 받고 충격받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조사를 통해 인종이나 증요 관련 범죄로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그는 "기림비는 공공의 재산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지만 누구든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거나 훼손해도 되는 공간이 아니다"고 강조함.
- 이날 오전 11시30분께에는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한국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현판 밑에서 '日本國竹島'(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의미)가 새겨진 가로 5cm, 세로 5cm 크기의 스티커가 한 민원인에 의해 발견됨. 일본어로 된 글자 밑에는 영어로 'Takeshima is Japaness Territory'라고 쓰여 있었음. 총영사관은 뉴욕경찰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고 경찰은 사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 로톤도 팻팍 시장은 뉴욕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직적인 범죄인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겠다고 밝힘. 팻팍의 위안부 기림비는 미국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3년여 만인 지난 2010년 10월23일 시민참여센터를 주축으로 진행된 미국 동포들의 풀뿌리 시민운동 결과로 세워짐. 서구권 최초로 건립된 이 기림비는 당시 미국은 물론 일본과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음.
- 하지만 일본에는 언제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고 급기야 일본 정부는 올해 이 기림비를 철거하기 위해 노골적인 외교활동을 벌이다 빈축을 샀음. 일본 정부는 지난 5월1일 히로키 시게유키 뉴욕총영사 등을 팻팍 시에 보내 거액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했다가 면전에서 거절당함.
- 이후 자민당 소속 중의원 4명이 같은 목적으로 시청을 찾아가 위안부는 일본 정부나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 업자가 운영했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함. 한편 지난 6월 서울에서는 한 일본인이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앞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흰색 말뚝을 세워 논란을 일으킴.

라. 미·중 관계

- **오바마와 롬니의 '중국때리기' 중국네티즌을 성나게 하다(10/22, CNN)**
 - 오바마 대통령과 및 롬니가 대선의 논제로 '중국'을 상징하였음. 두 대선 후보모두 미국의 경제적 침체와 성장하는 아시안 파워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며 연일 거친 입담을 펼치고 있음. 이런 수사적인 논쟁은 비공적 무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날카로운 비판을 포함하고 있음. "중국은 현재 수년간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라며 지난 주 토론에서 언급함. 그는 또한 "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취임첫날에 상징할 것"이라고 덧붙임.
 - 오바마는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오바마는 "롬니는 중국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에 선구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리고 스파이를 만들어 내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월요일 오후에 마지막 토론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외교부문의 모든 집중이 중국에 쏟아짐. 토론 내내 롬니와 오바마의 중국관련 멘트는 "The China Fallacy"의 저자인 도널드 그로스씨를 짜증나도록 함. 두 캠페인진영을 염두해 두며 그는 "미국의 불안정한 경제적 문제와 미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중국에게 책임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중국내 가장 큰 규모의 마이크로블로그인 신화웨이보를 통해 중국네티즌들의 원성을 삼.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감정은 지난 몇 년간 냉각되었음. 2010년 68%의 중국인들은 그들의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협력국가로 묘사하였고 8%는 적대국으로



모사함. 2년 후에, 단지 39%만이 미국과 유대감이 있다고 모사하였으며 26%가 적대국이라고 모사함.

- 중국과 미국의 시민모두 정권교체의 한가운데 있음. 11월 8일 미국의 대선 단 이틀 후에 중국인 공산당의 상위랭킹을 재형성할 정권교체를 시작할 예정임.

마. 미·일 관계

● "중요한 동맹국"에 일본거론 없음-대통령 선거 토론(10/23, 요미우리신문)

- 오바마 미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에 의한 22일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미국을 "태평양 국가" 라고 표명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자세를 재차 밝힘. 두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국제적인 무역 룰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대 중국 관계의 심화를 모색하는 입장을 나타냄. 두 사람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평가하는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美日, 섬 탈환 훈련 취소...中 반발 의식(10/28,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내달 합동 군사훈련에서 예정했던 도서 탈환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함. 2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 등은 지난 26일 열린 회의에서 섬 탈환 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
- 미국과 일본은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자위대와 주일 미군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일본 남부의 규슈와 난세이(南西)제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하기로 함. 훈련 기간에 양국은 오키나와 부근 무인도인 이리스나섬(入砂島)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의 도서 지역이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한 섬 탈환훈련도 계획함.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현지 주민이 무인도의 훈련사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섬 탈환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함.
- 아사히신문은 계획했던 섬 탈환 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신형 수직이착륙기의 오키나와 배치 강행, 미군 병사의 여성 성폭행 사건 등으로 오키나와의 반발이 심해 섬 탈환 훈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함. 그러나 섬 탈환 훈련의 중단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11일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에서의 반일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중국 정부의 경제·외교 보복, 센카쿠 해역에서의 양국 감시선 대치 등으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섬 탈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중국 국방부의 양위쥘(楊宇軍)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외



국가들을 끌어들이 지역 내 긴장만을 높이는 군사훈련을 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미국과 일본의 합동 훈련에 반발함.

바. 미·러 관계

● 주중日대사 "중사람들 마음속에 '일본은 도둑'(10/22, 인민일보)

-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는 최근 잠시 업무 보고차 귀국함. 지난 7월 '말실수로 본국 소환 당시 침묵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20일 모교 나고야대학에서 연설을 함.
-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이치로 대사가 연설 중 일중 양국의 다오위다오(釣魚島)로 인한 대립 상황에 대해 이번 대립 사태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며, 일본 측은 이를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대사 본인도 양국의 국교화 40주년 성과가 한번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우이치로 대사는 또한 "베이징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11월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빠르게 호전될 수 없다고 말함. 우이치로 대사는 연설 가운데, 일본 정부가 다오위다오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본인이 탄 차량이 중국인들의 적대적 공격을 받았으며,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본은 도둑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았고 이점이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본은 앞으로 일중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함.
- 요미우리신문은 니와 우이치로 대사가 연설 중에 심각한 위기감뿐만 아니라 초조한 심정 또한 표출했다며, 연설 중에 "일본은 영유권을 양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언급했지만, 여러 차례 '영토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영토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함. 아사히신문은 우이치로 대사의 말을 인용해, 대사가 18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만나 본인이 느끼는 '위기감'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함. 그리고 우이치로 대사가 연설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역사를 언급하며, "이 두 국가 정상과 리더쉽과 신뢰관계 그리고 안정적 정권은 영유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였다. 일중 관계 또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외교부, 日부총리 다오위다오 발언 관련 입장 밝혀(10/23, 인민일보)

- 니와 대변인은 22일 연례브리핑에서 일본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의 다오위다오(釣魚島)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은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다오위다오 관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길 줄곧 주장해 왔다고 전함.
- 21일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가 다오위다오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진 않지만 '분쟁'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밝힌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에 질문에 홍대변인은 "다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중국땅으로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오위다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다오위다오 관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길 줄곧 주장해 왔다."며 답변함.

- 추가적으로 전 미국 국무 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다오위다오 문제를 놓고 '조정'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측 대표단의 방중 일정에 대해 소개와 함께 아울러 미국 측의 '조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외교학회의 초청으로 전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10월 22일에서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미관계는 물론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본 대표단의 방중은 이른바 '조정'과 '외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함.
- 얼마 전 상하이 여행객 1500명이 일본을 관광한 일과 관련해, 홍 대변인은 중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수호하는 것이 양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일본이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분쟁을 인정하며 잘못을 돌이켜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부수상, 센카쿠 일·미 안보의 부적당함을 강조(10/23, 요미우리신문)

- 중국신화사 통신에 의하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리처드·아미테이지 미국무부장관, 스티븐·하드레이 전 미 대통령 보좌관외는 23일, 북경에서 리커창 부수상과 회담함.
- 리커창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전하며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승리의 성과와 국제 질서를 함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함. 이는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일·미 안보 조약 제5조를 센카쿠 제도에 적용하지 않도록 은근히 미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임.

● 中군함, 오키나와 해역 또 통과...中日 신경전(10/24, 연합뉴스)

- 중국해군 함정이 일본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
-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P-3C 정찰기가 22일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470km 떨어진 해상에서 유도탄 구축함 2척과 호위함 1척 등 중국 군함 3척을 발견함. 이에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정을 투입해 중국 함정의 움직임을 추적함. 중국 동해함대 소속 군함 7척은 지난 16일에도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통과해 일본을 긴장시켰. 당시 중국 함정들은 오키나와의 나카노카미(仲ノ神)섬 남서쪽 약 44km 해역까지 접근했고 이어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에도 55.56km(30해리)까지 다가감.
- 센카쿠 영유권 분쟁 외중에 중국 군함들이 잇따라 오키나와, 센카쿠 인



근 해역에 나타나자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공해에서는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자유항행권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일축함.

- 중국 국방부는 23일 "중국해군 함정이 상관 해역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하거나 항해를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유관 국가(일본)가 침소봉대하지 말고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바란다."고 밝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최근 부쩍 잦아진 중국해군 함정의 오키나와 및 센카쿠 해역 접근을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대일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 19일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관공선이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상황을 가정해 군함과 해감선(海監船·해양감시선), 어정선(漁政船·어업관리선) 등 11척의 함정과 전투기, 헬리콥터 등 항공기 8대를 동원, 군·관 합동 훈련을 시행하기도 함.

사. 기. 타

● "영토 분쟁 동북아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10/25, 연합뉴스)

- 러시아의 안보분야 최고위 실무 책임자가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이 이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 일본을 방문 중인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25일(현지시간)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통적 위협인 테러리즘, 극단주의, 마약 유통, 불법 이민 등과 함께 역내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이 또 다른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정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함.
- 파트루세프 서기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간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쪽도 편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그는 "러시아는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을 것이며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함.
- 파트루세프는 방일 기간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 등과 만났음. 일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파트루세프 서기의 일본 방문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과 노다 총리간 정상회담 개최에 건설적 분위기를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음.
- 노다 총리는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이는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와 푸틴 대통령간 합의에 따른 것임.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에 대해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